1. 기초생활 수급자
   1. 판단기준
      1. 근로능력
         1. 미성년자, 만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지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자,   
            군복무자를 제외한 그 외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 
            것이라 가정(추정소득)
      2. 부양의무자
         1. 부모, 자녀, 사위, 며느리의 재산 및 소득으로 판단
      3. 보유재산 여부
   2. 지원내용
      1. 생계급여/주거급여 (최저생계비의 8-90%)
      2. 의료보험비 면제
      3. 쌀가격 할인
      4.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및 대학교 국가장학금 지원
   3. 문제점
      1. 부양의무자 판단기준
         1.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
         2.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겼던 경우
      2. 추정소득의 문제
         1. 아르바이트, 근로장학금 등을 월 소득으로 계산하여 생활비 지원이   
            중단되는 경우
2. 건강보험

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대부분의 진료 금액을 국가가 납부하고 일부의   
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는 정책.   
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함

* 1. 특징
     1.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

가난한 사람의 진료비를 부자들이 충당하는 제도

* + 1. 동일한 급여 범위

납부하는 보험료에 상관없이 같은 진료에는 같은 금액을 지원

* + 1. 강제성을 지닌 보험료 징수

조세는 아니지만 의무적인 납부가 이루어지고 미납시 징수 절차가 진행

성공적인 공적 보험의 사례로 손꼽히지만 제도상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.

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.

1. 국민연금

월 소득의 9%를 납부하고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.

노년층의 연금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.

1. 강제가입
2. 연금고갈 우려

2040년에 최고액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감소하여   
2060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.

1. 워킹푸어에 지워지는 과중한 부담

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연금이 징수당하므로 워킹푸어의 경우 체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.

1. 수급권자의 사망

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최종적인 연금 수령액이 그 동안 납부한 액수에 못 미치므로 연금가입에 거부감을 일으킴.